

2. 정책 동향

□ 정책 이슈 : 5대 기업그룹의 구조조정 방향

- (내용) 정부와 세계는 5대 기업그룹 구조조정 방향을 담은 「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 정부·세계·채권은행단 합의문」을 발표함
- 정부는 5대 기업그룹을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 위주로 재편하고 「경쟁력을 갖춘 독립된 기업의 결합체 (독립기업연합)」¹⁾로 전환시킨다는 방침

< 합의문의 주요 내용 >

구 분	주요 내용
핵심 분야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그룹당 3~5개 주력 업종 위주로 재편 - 현재 5대 계열사 264개를 130개 내외로 축소 - 재계 자율 사업 구조조정 통해 과잉·중복 투자 해소 - 합병·매각·청산 등을 통한 限界 계열사 정리 및 分社
상호 채무지급보증 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異業種間 채무보증 12조 7천억 원 연내 해소 - 2000년 3월 말까지 상호지급보증 해소
재무구조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非主力 사업부문 매각 등 자구 노력(5대그룹 약20조원)과 증자 통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- 경영권 유지 전제하에 채권금융기관과 대출금 출자전환 실시 - 99년 말까지 負債比率 200% 달성 - 12월 15일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
경영 투명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9회계년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준비 - 이사회중심 경영체제 전환 - 선진화된 경영지배구조 정착

- (합의 이행 장치) 합의문 이행을 위해 정부와 채권단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각종 '이행담보장치'를 준비하고 있음
- 5대그룹은 분기별로 구조조정 계획상의 이행사항을 명시해 主채권은행에 제출하여야 함
- 채권단은 출자전환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나 사외감사를 파견하고, 약정서 불이행 그룹에 대해서는 여신 회수, 채무보증 이행 촉구 등을 행할 방침
-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내용의 이행을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부당 내부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

1) 獨立企業聯合이란 같은 회사명을 사용하되 완전히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그룹을 의미. 그 예로는 일본의 미쯔비시중공업, 미쯔비시상사 등이 있음

- (평가) 이번 합의 내용은 대기업 구조조정의 큰 틀을 마련한 것으로,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
 - 대기업이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중복 투자에 의한 국민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
 - 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비율이 2백% 이하로 낮아지고 상호지급보증이 해소되는 등 재무구조의 선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회복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임
 - 대외적으로는 국내 대기업 그룹에 대한 외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줘 국가신용등급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
- (보완과제) 금번 정책 방향이 기업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의 급격한 구조 개혁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
 - 이번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금융 부문만을 강조하고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어, 향후 유망성이 있는 사업이라도 현재 수익성이 없으면 정리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등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킬 우려가 있음. 즉 기업들은 당장의 현금 회수가 보장되는 안전 위주의 사업만을 추구하게 되는 등 중장기적인 산업정책적 고려가 부족함
 - 정리 계열사의 직원에 대한 인력정리가 불가피하여 “失業大亂” 사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
 -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,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, 금융기관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, 각종 정부규제의 개혁 등이 전제되어야 함

< 向後 構造調整 日程 >

時 期	主 要 內 容
1998년 12월 15일	- 財務構造改善 約定 締結 - 出資轉換 對象 企業 확정
1998년 12월 31일	- 異業種間 相互支給保證(12조 7000억원) 해소
1999년 중	- 結合財務諸表 적용 - 限界系列社 退出, 分社·合併·賣却 진행 - 채권단, 지원계열사에 社外理事-社外監事 파견
1999년 말	- 부채비율 200% 달성 - 계열사 260여개에서 130여개로 축소
2000년 3월말	- 相互支給保證 완전 해소
2000년 3월말 이후	- 主力業種 위주로 소그룹화

(정 반 석 bsjoun@hri.co.kr ☎724-4045)

□ 정부 정책 동향 (11. 30~12. 6)

<p>재정경제부(12.1) 내년부터 법정퇴직금제를 기업연금제로 전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립 퇴직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금융시장을 활성화할 방침 - 더불어 현행 우리스주제를 폐지하고 종업원과 회사가 공동 출자해 자사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의 종업원지주제 도입
<p>국무회의(12.1) 내년부터 신정 휴일 1일로 축소 결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정과 설날이 모두 연휴로 되어있어 이중으로 쉬고 있는 만큼 이를 합리화할 방침
<p>경제장관 간담회(12.1) 5대 그룹 사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합병이나 자산부채양도(P&A)를 허용할 방침 - 그렇지 않을 경우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강제 기업개선작업(workout)에 착수
<p>국회 보건복지위원회(12.1) 국민연금법 개정안 확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9년 4월부터 자영업자 등 전국민을 포괄하여 시행 -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월평균 소득의 4.5%씩 분담
<p>국회(12.2) 상법 개정안 통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식분할 제도 도입, 1주 최저액 100원으로 인하, 주주대표소송 자격 완화, 지배주주에 연대배상책임 부여, 소규모 합병의 경우 주주총회 생략 허용 등
<p>건설교통부(12.3) 공공사업 기획·설계분야 효율화 방안 마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0년부터 공공기관 발주 대형공사(사업비 500억 원 이상)는 완공 후 사후 평가 실시, 사업 타당성 조사시 평가 실명제 도입 등
<p>경제대책조정회의(12.4) 21세기 지식기반산업 육성 방안 마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디자인, 관광, 문화, 정보통신 등 4개 분야에 2003년까지 총 7조 2천억 원 투자 - 해양관광벨트 개발, 게임·영화 투자조합에 세제 혜택,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TV 산업 육성 등
<p>금융감독위원회(12.4) 5대 그룹 워크아웃 대상 선정 기업 일부 수정 요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자 유치가 쉽고 사업성이 좋은 주력 기업으로 수정하도록 요구 - 더불어 7개 사업구조조정 대상 기업, 자동차, 한계기업, 부채 규모와 비율이 과대한 기업 등 제외 요구
<p>노동부(12.6) 주요 서비스산업 고용 창출 추진 전략 마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업대책의 기본 방향을 사후적 실업관리에서 적극적 고용 창출로 전환하는 내용 - 관광, 문화 및 영상, 보건의료, 정보통신, 유통산업 등 5개 주요 서비스산업 중심 고용 창출 추진

(홍성민 hsamu@hri.co.kr ☎724-4034)